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의 한계: 비판 사회학적 고찰*

Limits to the Market Ideology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Issues:
A Critical-Sociological Review

김홍순**

이 글은 비판 사회학적 시각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이 환경문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유재산권의 부여’와 ‘환경의 상품화’가 왜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우선 시장주의가 주장하는 환경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부여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문제이며, 저소득층이나 미래세대와 같은 특정계층이 자원배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시장주의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환경을 인간주의적 시각에서 재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환경의 상품화와 관련해서 이 연구는 시장주의가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약한 지속 가능성 가설은 반생태적이고, 둘째, 환경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인간주의적 시각 때문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환원주의는 복잡한 총체로서 다루어져야 할 환경을 원자화·단순화시킴으로써 취약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환경의 상품화는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이며, 다섯째, 시장주의는 선호공리주의에 기반하나 선호는 얼마든지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호(signal)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요어: 시장주의, 사유재산권, 환경의 상품화, 비판 사회학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soon@hanyang.ac.kr)

1. 서론

환경오염은 전형적인 ‘시장실패’ 현상으로 평가된다. 시장 참가자들이 생산과 소비에 있어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과잉생산과 과잉 소비가 일어나고 이것이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의 ‘공유재’적 속성에 기인한다. 즉,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는 환경의 속성이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해결책으로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일치, 즉 ‘오염자(원인자) 부담’을 통해 비용을 내부화시키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환경오염이 전형적인 시장실패 현상으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에 1970년대 이전까지 환경문제는 주로 정부개입에 의한 직접규제에 의해 다루어져왔다(김선희, 1992; 이광수 외, 1999). 그러나 직접규제의 문제점¹⁾과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조류 속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이 환경문제를 다루는 기조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장주의적 접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핵심은 그동안 자유재로 인식되어온 환경에 소유권과 재산권을 설정하고 상품화를 통해 가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김정호, 1999; Leff, 2001). 같은 배경에서 하딘(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에 영감을 받은 일각에서는 개인의 ‘이기심’만이 환경을 구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Ridley and Low, 1993).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시장주의적 접근은 기술주의적 처방과 짝을 이루어 환경문제 해결의 주류담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Foster, 2007). 본 연구는 이러한 시장주의적 접근의 가장 핵심적인 인식

1) 직접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김선희, 1992; 김연태, 1996; 김정호, 1999). 첫째, 관련 기업의 생산구조를 알아야하므로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엄청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둘째,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의 인센티브를 약하게 한다. 셋째, 오염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약하다. 넷째, 정치적 고려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개별 기업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강제적 조치다. 여섯째,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일곱째, 결국 국민의 자유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가 불가피하다.

두 가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는 ‘사유재산권의 부여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는 ‘환경의 상품화, 즉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문제제기는 결국 ‘시장이 환경을 구할 수 있다’는 시장주의의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비판 사회학적 시각을 채용하고자 한다. 비판 사회학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자본주의 사회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회(과)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시장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틀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주의가 범하고 있는 ‘범주착오의 오류(category mistake)²⁾를 철학적·정치경제학적 차원에서 비평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비판 사회학적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2. 시장주의의 개념과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

1) 시장주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시장주의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장주의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우월성 또는 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하는 인식체계의 총칭이다. 시장주의는 당연히 시장 외적인 요소에 의한 자원배분을 불신한다. 정부는 그 대표적인 주체라 할 수 있다. 시장주의는 구체적으로 신고전파 경제학과 시장원리(근본)주의로 구분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의 결함을 인정하고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수준에서의 정부개입을 용인한다. 그러나 시장원리주의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시장개입에 대해서도 그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설사 시장실패가 있다손 치더라도 시장이 잘 못하는 것은 정부도 잘하지

2)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려는 시도나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

못하며, 시장실패 이상의 정부실패가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시카고 학파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시장원리주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시장주의는 신고전파적 접근과 신자유주의 모두를 의미한다. 신고전파 경제학 역시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자율조정 능력을 강하게 신뢰하기 때문이다.

시장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사상(事象)을 거래되고 배분될 수 있는 상품³⁾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환원주의(reductionism) 및 논리실증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뉴턴-데카르트 패러다임이 그 인식론적 기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Pepper, 1990). 또한 시장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하여 사적 소유권의 보장을 강하게 옹호한다. 시장주의자들은 사적 소유권의 보장이 자원의 최적배분에 기여하므로 ‘선진화된 사회’는 예외 없이 사적 소유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사회라고 주장한다(김정호, 2006).

이제 상술된 시장주의의 원리를 환경문제에 적용해보도록 하자. 시장주의는 환경문제를 시장기제가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이해한다(김승우 외, 2003: 15~16). 특히 가격기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문제의 본질로 본다. 가격은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가격기제의 왜곡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환경자원’의 오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주의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환경자원의 비용과 편익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시장에서 오염발생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오염행위자가 사적 비용만을 고려하고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사회적 비용을 해당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면(내부화), ‘합리적 경제주체’는 오염행위를 하지 않거나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시장주의자들의 인식이

3) 인간의 시각에서 쓸모없는 대상은 가격이 0인 상품이다. 토지의 경우 우리는 이를 ‘한계지’라고 부른다.

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환경자원에 적절한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합리적으로 이끄는 것이 문제해결의 요체로 이해된다.

소유권의 문제는 시장주의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핵심 키워드이다. 시장주의자들은 정부규제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실패와 개인자유의 제한 등 규제로 인한 비용이 편익을 능가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코우즈(Coase, 1960)는 환경문제란 본질적으로 환경재에 대한 소유권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제한다. 그는 환경문제 당사자들의 소유권을 확립시켜주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제한되어야 하며, 환경문제의 해결은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이루어진 시장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네 가지로 대별된다. 같은 시장주의적 인식 속에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첫 번째 부류이다. 둘째는 제도경제학적 접근이며, 셋째는 생태경제학적 사고를 통해 주류경제학의 시장주의적 접근을 비판한 것이다. 넷째는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하는 비판 사회학적 관점에서 시장주의의 인식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시장주의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각과 시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비시장적 요인이 시장주의적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시장원리주의적(market fundamentalist) 시각으로 구분된다. 우선 시장원리주의적 시각에 있어서 슈미트하이니(Schmidheiny, 1992)는 시장주의적 접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대중의 시장개입이 시장을 왜곡시켜서 ‘시장의 불완전성’을 창출하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완벽한 시장에서의 의탁과 시장왜곡의 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시장주의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가격부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에서 ‘간접개입’이라 불리는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불가피하다(이정전,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원리주의자들은 간접개입이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실패’로 규정한다(이상호, 2005). 최소한의 개입이라 할 수 있는 간접개입조차도 부인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코우즈(Coase, 1960)가 주장하는 정부에 의한 소유권의 정비는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작업이므로 환경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장원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장주의의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는 시각으로는 스티글리츠(Stiglitz, 1988), 전상경(1992), 김연태(1996), 이광수 외(1999) 등이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적 접근의 효용성을 인정하나, 세금부과 등 간접규제 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직접규제 등 비시장적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주로 시장주의적 접근이 기반하고 있는 전제나 실행상의 기술적 문제를 들어 시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한다.

우선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환경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코우즈의 정리는 정보의 비대칭성, 관련 집단의 크기, 재산권 설정 등의 문제로 인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전상경, 1992). 또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으로 코우즈의 정리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Stiglitz, 1988; 김경환·서승환, 1996). 둘째, 피규제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간접규제가 확실한 오염저감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김연태, 1996). 셋째, 피구세(pigovian tax)의 부과를 위해서는 규제당국이 엄청난 정보력과 재정력을 지녀야 하고 측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세금으로서의 효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이광수 외, 1999).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한결같이 비시장적 접근 역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양비론적 접근을 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시장적 접근과 비시장적 접근이 대립되는 환경관리 방안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접근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김연태, 1996). 따라서 이들은 시장주의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부류는 오스트롬(Ostrom, 1990)을 필두로 한 제도경제학적 접근으로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시된 이론이다. 오스트롬은 정부에 의한 직접 규제와 시장주의적 접근 중 한 가지만 옳다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두 접근은 모두 상황에 따라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와 ‘자기통치(self-governance)’라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구성원들이 자율에 의해 공유재를 관리하는 방안인데, 이기적 개인은 무임승차를 원하지만 동시에 다른 무임승차자를 감시하는 모순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 착안한 대안으로 개인이 아닌 공동체적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이기심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제3의 접근이라 할 만하다. 오스트롬은 일련의 사례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수환·김미숙(2007)은 ‘공유지의 비극’은 ‘개방지(open space)’를 공유지로 오해한 것이라는 오스트롬(Ostrom, 1990)의 전제를 바탕으로 몽골 방목지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 후 몽골 방목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유화가 아닌 공동체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유화가 환경보호를 위한 유일한 대책은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승우 외(2003)는 “모든 이의 자산은 누구의 자산도 아니다”라는 고든(Gordon)의 규정을 원용하면서 ‘공유자원’과 ‘개방자원’은 동일한 개념일 뿐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김정호(2006) 역시 몽골의 특수한 토지소유제가 목축업이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분석하면서 시장주의적 접근이 몽골에서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는 생태경제학 분야인데, 생태경제학은 매우 다양한 시각이 공

존하는 분야이므로 하나의 단일한 대오로 규정하기는 어렵다(이상호, 2005; Foster, 2007). 여기서는 이상호(2005)의 규정을 원용해서 ‘엔트로피 생태경제학’ 계열을 생태경제학으로 규정하고 포스터(Foster, 2007)가 지칭하는 생태경제학과 이상호가 ‘정치생태학’이라고 규정한 부분은 다음의 비판 사회학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다게시 무로다 등(室田武 et al., 2002)은 주류 환경경제학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이는 잘못된 이론이라고 지적한다. 즉, 물질순환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연환경의 파괴는 비가역적이므로 내부화(원상회복)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상호(2005)는 가격 메커니즘은 환경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원과 에너지의 질적 특성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은 양적인 측면은 고려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가격체계가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생태경제학의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자원 희소성의 문제를 가격유인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자원은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공허한 논변일 뿐이다.

최근 생태경제학은 인간중심적 관점을 탈피해서 생태계 본연의 가치를 측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최미희, 2002). 생태경제학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채용하는 경제적 가치 측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인 전략은 생태계가 피해를 입기 전의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필요한 행위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생태경제학이 인간의 시각에서 본 경제적 가치 외에 어떠한 추가적 가치가 생태계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편으로는 한번 손상된 자연은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복원비용을 언급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태경제학이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이 실은 생태경제학이 지양하고 싶어 하는

인간중심적 가치라는 사실이다. 본질적으로 ‘측정(measurement)’이란 행위는 환원주의를 의미하며 논리실증주의적 고구(考究) 행위라는 점에서 생태경제학의 이러한 전략이 신고전과 경제학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에 속하는 연구로는 제이콥스(Jacobs, 1994), 노진철(1995), 김명식(1998), 이정전(1999, 2002), 포스터(Foster, 2001; 2007), 레프(Leff, 2001), 정규호(2002) 등이 있다. 이들은 시장주의적 접근이 단순히 방법론적 문제뿐 아니라 분명한 인식론적·도덕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심화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들은 시장주의적 접근을 ‘자본주의적 방법’으로 규정하면서,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축적을 위한 축적 체제’이므로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O’Conner, 1993). 즉, 자본제 사회에서 과잉생산과 과잉소비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며, 시장은 그 거래의 장이 된다고 했을 때, 시장이 환경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식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은 그 과학성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기보다 단순히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로 폄하된다.

본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의 초점이 바로 이 비판 사회학적 시각이다. 본 연구는 전술한 다른 접근에 비해 인식론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 사회학적 관점을 통해 시장주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시장주의적 접근에 대해 일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생태경제학 역시도 시장주의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하는 작업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의 연장이라고 평가한다. 상술한 비판 사회학 관련 연구들은 시장주의적 접근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유재산권과 환경의 상품화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표 1>은 시장주의적 접근에 대한 상술한 네 가지 시각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1> 환경문제에 대한 각 학파별 이해

		관련문헌	논의의 내용
시장주의	시장 한계 인정	Stiglitz(1988) 전상경(1992) 김연태(1996) 이광수 외(1999) 등	시장주의적 접근의 효용성을 인정하나, 간 접규제 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직접규제 등 비시장적 접근을 병 행해야 한다고 주장
	시장원리 주의	Schmidheiny(1992) Coase(1960) 등	환경문제의 원인을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 해 야기되는 ‘정부실패’에서 찾음
제도경제학		Ostrom(1990) 장수환·김미숙(2007)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인정. 자기조직화와 자기통치를 중시
생태경제학		최미희(2002) 이상호(2005) 室田武 외(2002) 등	주류경제학의 주장과 달리 자연환경의 파 괴는 비가역적이므로 내부화가 불가능하 다는 인식
비판 사회학		O’Conner(1993) Jacobs(1994) Harvey(1996) Leff (2001) Foster(2001, 2007) 노진철(1995) 김명식(1998) 이정전(1999, 2002) 정규호(2002) 등	시장주의적 접근이 단순히 방법론적 문제 일 뿐 아니라 분명한 인식론적·도덕적 한 계로 인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심화 시킨다는 주장

3. 시장이 환경을 구할 수 있을까?

1) 사유재산권의 설정

맨큐(Mankiw, 2000)는 시장기제가 환경을 구할 수 있다는 논거로서 소와 코끼리의 예를 든다. 사유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코끼리는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주인이 분명한 소는 멸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아프리카에서의 코끼리 보호를 예로 들고 있다. 코끼리 사냥을 엄격하게 통제한 국가와 개인 토지에서 코끼리 사냥을 허용한 국가 중 후자의 경우가 더 효과적으로 코끼리를 보호했다는

것이다. 일찍이 하던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유재산권의 설정을 주창한 이래 이러한 시장주의의 관점은 하나의 정설로서 자리를 잡아 왔다.

이러한 사유재산권 설정의 주장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갖는다. 첫째, 사유재산권이란 사적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 환경문제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김명식, 1998; 이정전, 2002; 이상호, 2005). 사적 영역의 문제는 개인의 선호(또는 그 집합)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환경에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는 주장 역시도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적절한 수준의 환경의 질을 유지하자는 견해이다. 그러나 환경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 그리고 생태계 전체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선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은 방법론적으로는 정교하지만 그 가치의 전제는 조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개인들의 선호에 의해 전체의 소유를 결정하지는 것은 논의의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가 맞다면 모든 국공유지는 개인들에게 불하되어야 하며, 해당 토지의 자연물은 모두 사유재산이 되어야 한다. 공공재는 모두 없어져야 하고 시장기제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그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유재산권 설정의 주장은 특정 계층을 배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김명식, 1998; 이정전, 2002). 그 계층이란 저소득층과 미래세대를 의미한다. 환경에 대한 재산권 설정에 의해 저소득층은 공유자원에 대한 지분상실과 삶의 질 및 생존권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앞서 코끼리 보호를 위해 개인 토지에서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한 예를 지적한 바 있다. 재산권 설정 이전에 코끼리는 모두의 것이었지만, 사유재산권 인정 후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유물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코끼리는 공유물일 때보다 잘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득권의 강화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코끼리 문제가 단순히 부의 지분과 관련된 문제라면, 중세 유럽의 토지 소유권 문제는 생존과 관련된 이슈이다. 중세의 농노들은 땅에 긴박된 존재였으므로 신체적 자유는 없었지만 땅의 이용권만은 확실히 보장 받았다. 산업화와 함께 경작보다 목축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지만 소유권⁴⁾의 일부를 갖는 농노들로 인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저해되었다. 김정호(2006)는 중세의 이러한 불분명한 토지소유제가 인클로저(Enclosure) 운동을 통해 해체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이 명확해지고 생산력이 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이면에는 토지로부터 내몰린 농노들의 비참함이 있었다. 토마스 모어는 이를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묘사한 바 있다.

환경분쟁에서 코우즈의 정리와 같은 당사자 간 협상을 상정했을 때, 저소득층은 자신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취약하므로 타인의 쾌락(utility)을 위해 자신의 삶의 질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부유층이 자신의 삶의 질을 신장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의 환경을 악화시킬 때에도 저소득층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산술식으로서 양측이 얻는 쾌락수준은 동일하다. 즉, 부유층의 쾌락총량의 증감분은 (삶의 질 증분-지불비용)이 될 것이며, 저소득층의 쾌락총량의 증감분은 (금전적 수입-삶의 질 감소분)이 될 것이고 양변이 동일해지는 수준에서 등식이 성립될 것이다. 문제는 ‘삶의 질’로 표현되는 안전, 건강과 같은 가치가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유보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더욱이 그 금액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불리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는 환경위협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생명 가치를 50만 불에서 200만 불로 계산한 바 있다(Foster, 2007). 이는 거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의 1년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인간의 가치가 다르게 측정되는 상황에서 위의 등식은 부유층에게 유리한 ‘실질적인 부등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4)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재산권 설정은 낮은 보상으로 환경훼손의 비용을 저소득층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더욱이 미래세대의 경우는 사유재산권 설정에서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이익이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나 대중은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⁵⁾이 강하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의 이익은 정부에 의해서 옹호되어야 하나,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부 역시도 대중(현재세대)의 여론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의 이익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시장주의적 접근은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점에서도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 코우즈의 정리가 가장 좋은 예다. 코우즈의 정리는 오염피해자 역시 오염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Harvey, 1996). 코우즈의 정리의 이러한 인식은 논리적 정합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코우즈의 정리는 재산권이라는 조작적 개념에 몰두한 나머지 오염행위의 인과관계와 본말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통해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이 개인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자연을 공리주의적·인간주의적 시각에서 재단하도록 한다는 점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Foster, 2001, 2007; 정규호, 2002). 즉, 인간은 지금까지 알려진 지식과 인간에 대한 이익만을 기준으로 자연의 좋고 나쁨을 판정하고 그에 따라 자연환경을 개조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불필요하고 해로운’ 자연은 제거하고 ‘이익이 되고 좋은’ 자연으로 생태계를 단일화하고자 노력한다. 사회생물학자 윌슨에 따르면 매년 2만 7천 개 종(種)이 자연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현존하는 종 중 20%가 다음 30년 안에 소멸될 것으로

5) 시장주의자들은 이를 ‘높은 할인율의 책정’이라고 표현한다.

예측된다. 물론 이러한 소멸은 인간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다. 소와 코끼리의 역설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선택’에서 초래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횡포는 시장주의가 근간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조차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파멸적이다(Foster, 2001; Broswimmer, 2006). 첫째, 세계에는 약 3천만 개의 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까지 인간에 의해 확인된 종은 170만 종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잘 알고 있는 종의 수는 5%에 불과하다. 현대에 와서 종의 멸종은 더욱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일 100종의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종의 소멸은 식량과 약품을 제공할 수 있는 유전학적 보고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로서 처방약 가운데 40%가 자연 화합물을 기반으로 하며 제약업체는 이로 인해 연간 400억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의약품 후보로서 지금까지 연구된 식물은 전 세계 식물의 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종합해서 생물학적 제품과 공정에서 기인하는 경제적 이익은 세계경제의 45%이며 미국에서만도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7년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팀은 생태계가 주는 편익을 17가지로 정량화했는데, 그 1년 가치는 전 세계 총생산액인 25조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3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의 소멸은 결국 이러한 모든 잠재적 가치와 편익의 증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은 이익이 되는가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자연을 지속적으로 상품화, 표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 농업은 더 이상 자연과 관련된 산업이 아니다.⁶⁾ 플랜테이션은 자본주의 농업의 전형이다. 열대우림이 베어진 자리에 커피와 사탕수수가 재배된다. 버팔로는 사라지고 축우들로 대체된다. 숲 속의 다양한 종의 나무들은 베어지고

6) “경작(cultivation)과 (산업으로서의) 농업(agriculture)은 다르다. 경작은 밀을 생산하는 것이고, 농업은 인산비료를 똥으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 중 경작은 10%에 불과하며, 40%는 종자, 비료, 살충제, 기계 등 자본요소, 50%는 마케팅 비용과 유통비용이다”라는 포스터(Foster, 2001)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경제성이 가장 높은 단일 수종으로 조림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본에 의한 자연의 복속은 종다양성(bio-diversity)의 훼손과 함께 경작된 작물들이 유전적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취약하도록 만든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내려지는 비료나 농약과 같은 화학적 처방은 생태계 파괴의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단위 투입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곡물의 생산량은 그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는다. 결국 자본주의 농업은 화학적 요법에 더 많이, 더 강하게 의존하게 되고 이는 자연의 황폐로 이어진다.

셋째, 코모너(Commoner, 1980)는 네 가지 생태 법칙을 주장하는데 그 중 하나가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생태계는 유기적으로 관련된 요소들이 전체를 이루는 시스템이므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인간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의 인간화는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끊어 놓음으로써 예상할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국에 따르면 식물 한 종이 사라지면 최고 30종의 곤충, 식물, 동물이 연쇄적으로 멸종한다고 한다(Broschwimmer, 2006). 모리셔스 섬에 살던 도도새가 멸종한 후 도도새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던 나무가 사라졌고 연쇄적으로 그 섬에 살던 새의 절반이 멸종했다고 한다. 도도새의 예는 생태계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환경보호 방법은 자연을 현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환경이 인간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형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생태계는 큰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 환경의 상품화

1절에서 환경에 대한 사유재산권 설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에 대한 사유재산권 설정은 환경의 상품화로 연결된다. 결국 시장주의적 접근

의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의 상품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환경을 상품화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약한 지속 가능성 가설은 반생태적이다

주류경제학자들은 경제적 가치의 증가가 자연의 손상을 벌충할 수 있다는 ‘약한 지속 가능성 가설’을 신봉한다(Foster, 2007). 공리주의에 기초한 이러한 인식은 환경보존의 정당성은 경제행위자인 인간의 만족 극대화에서 찾아진다는 논리로서, 비용편익분석에 근거해 경제적 편익이 더 많다면 자연의 훼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발상으로 연결된다. 환경에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상품화하는 이유 역시도 비용과 편익을 견주어보기 위함이다. 시장주의자들은 개발에 의해 자연의 복원이 비록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개발이 자연의 손상을 능가할 만한 경제적 편익을 낳는다면 개발은 정당한 것이라고 인식한다(정규호, 2002).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경제학의 기본개념인 기회비용의 개념을 자연환경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 것이지만, 이는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범주착오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김명식, 1998). 자연환경은 비가역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일단 훼손된 자연은 복구가 되지 않는다.⁷⁾ 환경을 상품화하는 것 역시 같은 논리에서 잘못된 발상이다. 상품이란 돈으로 매겨진 대상의 이름이다. 더 많은 돈이 지불된다면 얼마든지 포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환경의 가치는 일정한 금액으로 측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 뿐더러(Leff, 2001), 다른 경제적 가치를 위해 포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상품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7)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각은 보존보다 복구의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보존이 낫다는 공리주의적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정규호, 2002). 앞에서 살펴본 생태경제학의 생태계 가치의 측정전략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모든 환경이 자원은 아니다.

환경이 상품화된다는 것은 환경이 거래될 수 있는 자원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환경이 자원은 아니다. ‘자원’이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 가치를 내포한 개념이다(정규호, 2002). 인간의 시각에서 유용한 대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은 자연에 돈의 개념을 결합시킨 개념이다(Harvey, 1996). 이를 통해 자연은 측정·비교·교환 가능한 실체(자원)가 된다. 결국 자원은 ‘상품으로서의 환경’을 가능케 하는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이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한다(Abelson, 1979; 유동운, 1992). ① 생산요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② 토지자원으로서 레크리에이션(경관)이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③ 폐기물 처리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을 자원으로 볼 경우, 자원이 아닌 것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앞서 사적 소유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쓸모없고 해로운 자연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또는 기껏해야 무관심한 것이 자연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다. 그러나 최초의 환경론자인 레오폴드(Leopold)에 따르면 경제성 있는 자연자원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김명식, 1998). 따라서 자연을 자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파멸적이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환경을 자원으로 보는 시각은 종종 환경문제를 자원고갈의 문제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이상호, 2005). 하지만 자원고갈을 막았다고 환경보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원의 영역 밖에 있는 환경이 95%에 이르기 때문이다. 인간의 무관심과 경원 속에 95%의 ‘비자원’에 문제가 발생할 때 생태계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시장의 관점에서 ‘쓸모없는’ 자원은 종종 사라져야 할 존재로 치부된다. 캘리포니아 북부의 수백 년 된 삼나무는 비생산적(쓸모없는) 자원으로 평가되어 잘려나가고 그 자리는 빨리 자라며 관리가 용이한 수종으로 대체되었다(Foster, 2007).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 환경을

구할 수 있다고 강변하지만(Ridley and Low, 1993), 이 숲은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논리가 적용됨으로써 파괴된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원으로로서의 유용성 여부가 인간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이다. 결국 시장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폭군(Leviathan)’이 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3) 시장주의는 환원주의이다

환원주의는 복잡하고 추상적인 사상(事象)이나 개념을 단일 층위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설명하려는 입장이다. 이는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의 인식론적 기초를 이룬다. 사회과학에서 환원론은 전체가 개체의 합이라는 관점에서 개체를 분석의 기초단위로 삼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채택한다. 발견된 이론의 일반성과 타당성의 강조라는 논리실증주의의 인식은 이러한 환원주의적 인식의 구체적 발현이다. 이 과정에서 사상의 단순화와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를 잘게 나누는 작업이 수반된다. 환원주의의 장점은 어려운 대상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사상(捨象)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환경에서 시장주의의 문제는 대상을 잘게 쪼갬다는 것이다(Foster, 2007). 즉, 환원론적 시각에서 전체 환경을 개별 환경요소의 합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새의 가치, 식물의 가치, 갯벌의 가치, 강의 가치를 조건부가치추정(CVM)이나 속성가격기법(Hedonic Price Technique) 등을 이용해서 측정해낸다. 경제학자는 이렇게 측정된 ‘환경재의 가치’에 근거해서 최적의 환경보호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가설과 ‘범주 착오의 오류’의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누고,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가격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환경은 단순한 환경요소의 합이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환원론적 관점에서 자원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갖는 상품으로 단순화되지만 기실 그것은 전체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더 나아가서는 가격으로 측정될 수 없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자원요소로 파악하는 시장주의의 환원론은 종종 파멸적 결과를 야기하며, 기껏해야 자연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갯벌을 매립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종종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판단되는데, 비용편익분석은 아무리 정교한 분석틀을 갖고 있다고 해도 원자화된 환경요소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총체로서 갯벌의 잠재적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⁸⁾ 따라서 그 가치는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고, 그 평가에 기초한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상품화 시도는 단순화할 수 없는 것을 단순화하려는 환원론적 시도 때문에 비현실적이다. 폴라니(Polanyi, 1997)는 ‘토지’를 오로지 ‘부동산’이라는 교환가치의 대상으로 조작화하려는 시장주의자들의 사고를 ‘공상주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시장주의자들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토지로부터 자연, 제도, 역사, 문화의 의미가 사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품화를 통해 환경을 관리하려는 것은 슈마허(Schmacher, 1973)의 지적처럼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공허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실사 환원주의적 입장을 수용한다고 쳐도 환원주의가 바라보는 환경의 경제적 가치가 ‘단위’ 환경재의 가치에 불과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숙고가 필요하다(이정진, 2002). 즉, 환경경제학은 종으로서의 고래가 아닌 한 마리 고래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책가들이나 일반인들은 그 단위 가치에 총수를 곱해 종 전체의 가

8) 비용편익분석은 이중계산 가능성 등의 이유로 파급효과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질적으로 환경가치의 계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치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고래 한 마리의 가치가 5만 달러이고 전체 고래 수가 천만 마리라면 고래라는 종의 가치는 5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환원론적 시각에서는 인간들이 고래를 모두 잡아서 고기를 먹고 기름과 가죽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500억 달러를 상회한다면 고래 종은 사멸되어도 무방하다는 추론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 비약에 근거한 잘못된 사고이다. 여기서 경제학적 방법은 단위 재화의 가치를 산정하는 역할로 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방법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전체의 10% 이내에서 환경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 종이 사라지는 것은 전체 환경에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지 모르므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학적 접근은 그 유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환경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앞서 언급한 잘못된 시각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돈만 주면, 돈이 된다면 환경을 얼마든지 훼손할 수 있다는 시각을 만연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은 비가역적이므로 일단 훼손이 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각은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인식이라 할 것이다.

(4) 환경의 상품화는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수 음용이 보편화된 것은 불과 10년이 채 안 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생수 또는 정수기는 거의 생필품화되었고, 생수의 경우 그 가격은 ℓ당 1,000원을 호가한다. 이러한 가격은 유가가 최근 급상승하기 전에는 경유가격에 맞먹는 가격이었다. 식수의 사유재화(私有財化)는 매우 성공적인 환경의 상품화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먹는 물이 상품화됨으로써 잘 보호되고 있다는 보고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지하수 고갈의 문제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⁹⁾

9) “영주 풍기읍 주민들 생수공장 건립 식수원 고갈 우려”, 《매일신문》, 2007년 6월 4일자; “생수개발 부작용 탓 물 부족 고통”, 《동아일보》, 2007년 10월 5

더욱이 앞서 사유재산권의 설정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의 상품화는 저소득층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전에는 자유재로 이용하던 자원을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시장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자원을 배분하지만 그 필요성 여부는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환경의 상품화는 결국 지불능력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의 선호는 반영할 수 없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정규호, 2002).

이와 관련해서 이정전(2002)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정수기 및 생수의 이용비율이 고소득층의 경우 16.7%에서 46.0%로 상승한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3.1%에서 27.7%로 상승했음을 보고한다. 이러한 자료는 지불능력을 지닌 고소득층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 생수를 더 많이 사먹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배경에서 김홍순(2002)은 2001년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식수로 ‘생수를 이용하는’ 가구와 끓인 ‘수돗물을 마신다’는 가구 사이에 95% 신뢰수준에서 분명한 소득수준의 격차가 있으며, 이는 주택의 규모 및 소유형태와도 긴밀한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수돗물을 마시는 가구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생수나 정수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먹는 물의 상품화가 매우 역진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그리고 현재 먹는 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김홍순, 2002; 환경부, 2007).¹⁰⁾ 이는 생수의 생필품화를 가속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서울시의 경우 현재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의 수질은 담보 상태에 있다. 한편 생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¹¹⁾ 따라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수돗물에

일자.

10)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 일반 성인 남녀 3,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 여론조사 결과 수돗물을 끓여서 마신다는 응답자는 42.3%,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신다는 응답자는 39.8%, 먹는 샘물을 사 마신다는 응답자는 8.6%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수돗물이 식수에 부적합하다는 응답자는 57.8%로 나타났다. 한편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응답자는 1.8%로 나타났다.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의 감소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총론적으로 고소득층은 환경에 대한 상품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회피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이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이 이루어지기 전에 환경은 공유재로서 자유재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의 심화와 함께 환경재가 희소해지면서 환경의 상품화가 진전되었고 이는 환경재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이정전, 2002). 즉,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이며 환경의 상품화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5) 선호는 불확실하며 조작될 수 있다

환경을 상품화하여 다루는 이유는 사람들이 환경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선호공리주의(preference utilitarianism)라 부른다(김명식, 1998). 우리는 흔히 물이나 공기는 매우 귀중한 자원인데, 왜 가격이 낮은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선호공리주의에서 이들 환경요소는 귀한 자원이므로 높은 가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해당 자원을 아껴 쓰게 될 것이므로 환경보호가 가능해진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따라서 표출되는 선호에 의한 가격의 책정이야말로 환경의 상품화가 환경을 구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더욱이 선호는 인간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자유주의의 인식론적 기초를 이룬다.

이정전(2002)은 선호를 현 세대의 '욕망'과 '기분'이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그는 환경의 문제를 선호에 맡겨둘 수 없다는 주장을 펼

11) 서울시 정수장 중 수질이 보고된 구의, 뚝도, 보광, 노량진, 영등포, 암사의 경우 2001년 이래 BOD 기준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거나 정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서울특별시, 2007). 한편 생수의 경우 1995년 전국적으로 14개에 불과하던 제조업체가 2006년 12월 현재 70개가 되었으며, 판매량 역시 1995년 47만 2천 톤에서 2006년 12월 현재 250만 6천 톤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환경부, 2007).

치는데, 이는 사람들의 욕망과 기분만으로는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사람들의 욕망과 기분은 자연의 수용능력범위, 생태적 한계를 넘어선 자연환경의 이용(exploitation)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선호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명식, 1998). 현대 시장에서 선호는 종종 광고와 선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다. 생산체제가 소비욕구를 인위적으로 창출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관련해서 현대의 매스 미디어는 도시의 안락함·쾌적함과 대비되는 자연의 원생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¹²⁾ 일방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는 도시민들은 자연에 대해 필요 이상의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경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도록 이끄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개발사업에서 도롱뇽과 터널의 가치가 상충될 때 다수의 도시민들은 터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도롱뇽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 등 환경가치에 대한 정보를 접하거나 교육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환경의 가치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정규호, 2002). 습지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습지는 단순한 진흙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응답자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응답 전에 찬반에 대한 논거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많은 여론조사나 학술연구들은 응답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선호도를 묻고, 이를 대중의 ‘선호도’로 발표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정책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환경에 대한 인간의 선호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며, 이러한 결과

12) 물론 자연이나 환경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사나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고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낮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즉, 일반인들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의 탐험이나 일상탈출 정도로 이해되는 측면이 강하다.

에 근거한 CVM이나 속성가격기법 등의 결과는 타당성이 매우 취약한 환경가치의 산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이 글은 비판 사회학적 시각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이 환경문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적 소유권의 부여’와 ‘환경의 상품화’가 왜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우선 시장주의가 주장하는 환경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부여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문제이며, 저소득층이나 미래세대와 같은 특정계층이 자원배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환경을 인간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인 시각에서 재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환경의 상품화와 관련해서 이 연구는 시장주의가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약한 지속 가능성 가설은 반생태적이고, 둘째, 환경을 유용성 여부(자원/비자원)로 나누는 것은 그 인간주의적 시각 때문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환원주의는 복잡한 총체로서 다루어져야 할 환경을 원자화·단순화시킴으로써 취약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환경의 상품화는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이며, 다섯째, 시장주의는 선호공리주의에 기반하나 선호는 얼마든지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호(signal)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주의는 그 정교하고 세련된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인식론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주의에 대한 대안

은 있는가? 김연태(1996)와 이정전(2002)이 제시하는 것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을 설정하여 모두가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방안과 함께, 환경문제의 개선에 기여하면 할수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도적 방안을 병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환경은 비가역적이고 유기적인 실체라는 점을 감안한 환경가치의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인식이 받아들여진다면 환경개발의 기회비용이 극도로 올라갈 것이므로 단순히 얼마간의 금전적 편익을 이유로 함부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앞서 비판한 시장주의의 틀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미봉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은 환경을 인간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고 자연의 눈으로 바라보는 생태론적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론적 인식전환의 첫걸음은 환경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에서 제기한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과 같이 인간이 생태계의 일원이며 환경의 훼손을 통해 당장의 이익을 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인류와 자연 모두가 파멸에 이르는 길임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교육과 지식인의 저술작업, 매스컴의 홍보기능,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주의’를 좁은 의미의 담론 차원으로 한정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의 환경문제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시장주의의 논리적 근간인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 연구 역시도 인간 중심의 공리주의의 틀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시장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 Abstract

Limits to the Market Ideology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Issues:
A Critical-Sociological Review

Kim, Heung-Soon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wo issues of “allowance of private property rights to environment” and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suggested by the market-oriented approach as effective alternatives in dealing with environmental problems. First of all, this study, regarding allowance of private ownership to environment, criticizes the market-oriented approach in terms of the following four aspects: the environment is pertinent to public realm and not to private realm; the approach tends to overlook the interests of unprivileged groups such as low-income class and future generation; it is morally unjust in terms of equally treating harmers and sufferers; and its anthropocentric viewpoint is extremely dangerous. Also, this study points out the following five problems of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First, the hypothesis of weak sustainability adopted by the market ideology is anti-ecological. Second, its attitude that regards environment as resources is extremely dangerous. Third, reductionism that is the basis of the approach cannot deal with environmental issues sufficiently. Rather, it can make the problems worse. Fourth, it is retrogressive in terms of distribution of wealth. Fifth, although market-oriented approach is based on preference utilitarianism for the scientific analysis, people’s preference can be manipulated without limits in reality.

Keywords: market ideology, private property ownership, commodification of environment, critical sociology

참고문헌

- 김경환·서승환. 1996. 『도시경제론』. 홍문사.
- 김명식. 1998. 『시장과 환경』. 《철학연구》, 42호, 331~353.
- 김선희. 1992.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환경정책』. 《국토정보》, 124호, 77~82.
- 김승우 외. 2003. 『환경경제학』. 박영사.
- 김연태. 1996. 『시장경제적 수단에 의한 환경보호』. 《공법연구》, 24권 2호, 429~456.
- 김정호. 1999. 『시장 환경주의의 핵심은 환경의 사유재산화』. 《환경과 생명》, 21호, 102~109.
- _____. 2006. 『땅은 사유재산이다』. 나남출판.
- 김홍순. 2002. 『지방도시민의 식수 음용 행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2권 1호, 135~153.
- 노진철. 1995. 『환경문제에 대한 시장경제의 적응』. 《경제와 사회》, 27호, 192~222.
- 다케시 무로다 외(室田武·多辺田政弘·槌田敦. 2002. 『순환의 경제학』. 권영근·허헌중 옮김. 삼신각.
- 레프, 엔리케(Enrique Leff). 2001. 자연의 사회적 재전유에 관하여. 허남혁 옮김. 《공간과 사회》, 16호, 109~126.
- 맨큐, 그레고리(G. Mankiw). 2000. 『맨큐의 경제학』. 김경환·김종석 옮김. 교보문고.
- 브로스위머, 프란츠(F. Broswimmer). 2006. 『문명과 대량멸종의 역사』. 김승욱 옮김. 에코리브르.
- 서울특별시. 2007. 『2006 서울통계연보』.
- 유동운. 1992. 『환경경제학』. 비봉.
- 이광수·김일태·이상호. 1999. 『시장유인체계로서의 환경세 설정과 정책적 논의』. 《공공경제》, 4호, 32~59.
- 이상호. 2005. 『성장의 그늘을 밝힌다: 생태경제학』. 박만섭 엮음. 『경제학, 더 넓은 지평을 향하여』. 이투스서. 133~162.
- 이정전. 1999. 『시장 논리는 불평등·이기심·탐욕의 논리』. 《환경과 생명》, 21호, 110~119.
- _____. 2002. 『환경경제학』. 박영사.
- 장수환·김미숙. 2007. 『몽골의 방목지 관리제도의 특성과 공유자산 관리체계의 함의』. 《국토연구》, 55호, 81~98.
- 전상경. 1992.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 및 공공정책』. 《한국행정학보》, 26권 1호, 81~101.
- 정규호. 2002.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공리주의적 접근의 딜레마와 해법』. 《공간과 사회》, 17호, 145~165.

- 제임스 오코너(J. O'Conner). 1993. 『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 이강원 옮김. 《공간과 사회》, 3호, 33~62.
- 최미희. 2002. 『생태계의 가치평가기법』.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 2, 97~140.
- 커머너, 배리(B. Commoner). 1980. 『원은 닫혀야 한다』. 송상용 옮김. 전파과학사.
- 페퍼, 데이비드(D. Pepper). 1990. 『현대환경론』. 이명우 외 옮김. 한길사.
- 포스터, 존(J. Foster). 2001. 『환경과 경제의 작은 역사』. 김현구 옮김. 현실문화연구.
- _____. 2007.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추선영 옮김. 책갈피.
- 폴라니, 칼(K. Polanyi). 1997. 『거대한 변환』. 박현수 옮김. 민음사.
- 환경부. 2007. 『2006 환경백서』.

- Abelson, P. 1979. *Cost Benefit Analysis and Environmental Problem*. Saxon House.
- Coase, R.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 the Geography of Difference*. Oxford: Blackwell.
- Jacobs, M. 1994. "The Limits to Neoclassicism: Towards an Institutional Environmental Economics" in Michael Redclift and Ted Benton(eds.). *Social Theory and the Environment*. New York: Routledge.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dley, M. and B. Low. 1993. "Can Selfishness Save the Environment?" *The Atlantic Monthly*. 272(3): 76~86.
- Schmacher, E. 1973. *Small Is Beautiful*.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Schmidheiny, S. 1992. *Changing Course*. Boston: MIT Press.
- Stiglitz, J. 1988.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New York: Norton & Company.

논문접수일: 2008. 04. 22.

게재확정일: 2008. 05. 22.